

北美정상회담 성사 될까… 정동영 “오늘까지 北 표명 있어야”

〈통일부 장관〉

2025 국정감사

정동영 장관, 외통위 국정감사서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 트럼프, 할 수 있는 조치 다 해” 캄보디아 스캠 대응 관련 질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만남이 성사될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회동이 이뤄지려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북측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을 묻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늘 또는 내일 중에 북한의 김영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드러냈으며, 대북 제재 완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트라우마를 딛고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이루어지려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북측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의원이 “만일 북미대화가 열릴 시 개성공단 재개 등 우리 측의 요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조율이 돼 있느냐”는 물음에 정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을 상정해 한미간에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6년 동안 단절과 공백의 기간을 전환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 국면으로 가서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문제는 북

미간 문제다.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 핵문제”라며 “핵문제의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 일체 대화가 없고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대화하는 것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민의 염원을 생각할 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보고 있는 편”이라고 부연했다.

김태호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지금까지 북미대화에 비핵화가 전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문제와 관계없이 이젠 대화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동결 혹은 핵 감축으로 이슈가 전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그렇게까지지는 해석이 안 된다. 미국이야 말로 NPT(핵확산방지조약) 체제를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제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제재는 좀 더 복잡한 문제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로 다시 가져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어렵다”며 “대화 테이블에서 북한이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제재에 대한 입장에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 종합국감에선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응하기보다 무능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여권 재발급을 위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찾았고, 대사관 경찰 영사가 자수를 권유한 후 귀가조치 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통 사람도 길에서 만나면 이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 한인 총책이고 밑에 범죄자들이 한국인들을 여전히 유인하고 있다”며 “적색 수배가 된 사실도 알려주고 도주를 방조했다. 납득이 불가하다”고 질타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李 정부, 주거 파탄정책 밀어붙여”

장동혁, 청년들과 부동산 정책 간담회 “정부가 규제 휘두르면 집값 폭등 청년·서민 주거 부담만 커지고 있어”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악시키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챘다고 판단하고 실수요자인 청년들을 만나 주택 정책을 함께 고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겸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란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한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모든 고통의 시작은 민주당 정권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히 실패한 정책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좌악시키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오

만을 끝이 없다. 자신들은 국민에게 하지 말라고 한 방법들로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 짜리 집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한다”며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는 청년들은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심지어 15억 원은 서민 아파트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망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환경과 매달 생활비를 고민하는 청년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청년들은 정부가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집값은 폭등한다는 쓰라린 진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 지금도 전세가 급속도로 줄어 들고 월세가 오르고 있다”며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은 잔혹한 생존게임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오늘 포기하고 내일 벼락거지가 될 지, 오늘 무리하고 내일 영끌거지가 될 지 강

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의 시기는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할 인생의 황금기다. 그 소중한 시간을 저축이 아닌 생존 도박에 쏟아붓게 하는 비정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아닌 생생한 절규와 절박한 한숨을 직접 듣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의 참석한 청년 김세린 씨는 “청년세대가 충분한 노력으로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현실은 막막하다. 대부분의 기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청년들이 먼 거리에 월세를 선택하게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청년들은 더 많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을 출퇴근에 쏟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생기는 비용 부담은 청년 개인에게 과중하게 전가되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와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김형수(왼쪽 네번째부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과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화오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합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476억 손해청구 취하

한화오션, 하청지회 대상 소송 취소 이용우 의원 “합의 결정 높게 평가”

한화오션이 파업에 따른 손해 476억 원을 배상하라며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합의를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합의를 통해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하고, 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양측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결음을 내딛었다”며 “지난 갈등의 과정을 뒤로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하청지회장은 “손배소송을 취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늘 손해배상 취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이 개

정됐지만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해 내지는 못했다. 하청지회는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원청 한화오션에 지난 24일 교섭요구를 했다”며 “하청지회는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시절, 사측은 2021년과 2022년 하청지회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각각 6억 원과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업 51일만에 하청 노사는 임금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농성을 해제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김형수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하청노동자들이 실제로 지급할 수도 없는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면서 개별 노동자에게 고통을 가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 일었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의 주요 사례로 지적받았다.

양측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주도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사 양측의 합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형해화시키는 손배소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통과가 이번 합의 도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고위관리회의 시작으로 ‘APEC 정상회의 주간’ 개막

고위관리회의서 무역 등 활동 점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27일부터 이틀 간 경주에서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APEC 정상회의 주간이 공식 개막했다고 외교부가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과 옵서버 대표단, APEC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상회의(10월 30~11월 1일)와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10월 29~30일)를 앞두고 한 해의 활동 성과를 최종 점검했다.

고위관리회의는 APEC 회원 간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로, 매년 4회의 공식회의와 1회의 비공식회의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정상회의 및 합동 각료회의에 보고한다. 우리나라는 이치훈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이 고위관리로 참석했다.

이번 CSOM에 참석한 각국 고위관리들은 의장국 한국의 리더십 아래 올해 APEC 논의가 원활하고 의미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대표 성과로 제

시함으로써 역내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의 논의가 정상회의 계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밀히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또한 고위관리들은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EC),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예산운영위원회(BMC), 정책지원부서(PSU) 등 APEC 주요 산하회의체의 연간 활동 결과를 점검하고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 최종 점검 보고서 등을 승인했다.

/뉴시스